정부의 편애가 낳은 '기형아'

현장진단 —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치유책

"원가는 비싸져가고 물건을 사가는 사람은 적어졌어요. 전세 보증금은 몇백만원씩 올랐는데…"

남대문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박순애(50)아주머니의 이같은 푸념섞인 말은 경제악화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느끼게 끔한다.

지난 90년 4월까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49.9%, 장바구니물가는 68.2%나 높아졌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10명중 8명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심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 흑보라는 선진조국이나 자동차보급을 상승과는 달리 6공정권하에서의 한국경제는 "아시아의 호랑이 용은 커녕 '비리아'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 주간지의 보도처럼 급격한 혼돈속에 빠져들었고, 국민은 이미 경제에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위기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정부의 주장대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구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실때문인가.

최근 각광 대선공약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과 그 개혁방안을 시민·중소기업 경영자·연구원들을 통해 실질적인 분석을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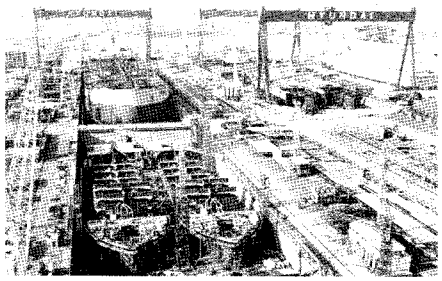
"86년부터 88년까지 세계적인 3저현상(저금리·저유가·저달러)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경제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때 생긴 이윤을 대기업들은 생산에 재투자 하기보단 부동산 매입에 쏟아붓기 바빴습니다. "석탈노동연구소 장영석 연구원은 한국경제위기 원인을 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찾는다.

또한 유종성 경실련 정책연구부장도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통한 막대한 불로소득 축적'과 그 결과 나타난 '소수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에서 한국경제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이렇듯 한계와 노동계는 한국경제를 기형적 형태로 만든 주범이 '재벌'이라는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3저호황속에서 기업가들이 벌어들인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의 대부분이 대기업 수중에 들어갔고 그러한 자금이 재생산을 위한 투자보다는 땅을 사는데 쓰여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은행의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88년말까지 30대 재벌이 은행에서 대출해간 자금은 13조4천7백억원이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9조원 가량인데 더큰돈까지 이들이 구입한 부동산 장부가격이 10조2천억원인 반면 이들이 소유한 주식가격은 6조원에 불과하다. 그간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부동산 투기에 썼으로써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그에따라 자연히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경제 문제는 재벌의 자본 독점화 및 부동산 투기와 그것들을 뒷받침해준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외의 존폐 재벌중심의 경제라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의지 없이는 정부의 경제회복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6공정부의 한국경제에 대한 그릇된 시각에서 비롯하나가 있다. 계 구축 스독점자본 형체와 경제구조 개혁 스금융조세의 민주화 스물가안정과 토지공개념 확대 스중소기업 육성및 강화 등 5가지로 압축된다.

"4천만 국민의 생산적 보호 최반 정도를 인구의 3%에 불과한 독점재벌이 지니고 있는 것이고 있다.

경실련 또한 개혁안을 통해 "금융실명제 실시,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세제의 강화, 중앙은행의 독립 등 금융 자율화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것"을 차기정부에 제시하고 있다.

한남대 홍성용 교수(경제학)는 "재벌들이 기술개발 투자에는 인색하고 비생산적 부분에 투자하여 불로소득을 올린 그릇된 행태는 정부와 재벌의 부정부패 구조가 낳은 것입니다. "라고 현 정부의 부정을 지난하며 "이제 더이상 조일금에 기초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기술개발에 우위를 점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이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벌들의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지금까지의 제도를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등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라며 차기정부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더불어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석탄노동연구소는 재벌위주의 경제를 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로 전환시켜야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재벌 소유의 부동산을 정부차원에서 압대해 중소기업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 주는 것이 경제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임을 주장하며 재벌해체를 경제개혁의 첫단계로 꼽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국경제를 비관하지만 그러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희망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경제위기가 독점재벌위주의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러한 희망 또한 올바른 경제구조의 정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특집부〉

경제위기, 부동산투기 앞장선 재벌이 주범
경제독점화 막는 금융실명제 실시돼야

세계경제위축화와 대기업의 부동산투기로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섰고, 투기에 의한 지가및 주택가 급등은 여론의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때 정부는 주택 2백만호 건설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려 했고 저금리를 통한 수출지도를 위해 총액임금제 5%인상을 강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다지 실효성을 기두지 못했다.

건설업을 하는 이태환씨(49)는 주택 2백만호 건설의 허구성과 부작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서민형 아파트를 짓는다면서 4·50평 아파트는 왜 지어요? 게다가 대규모주택을 건설하면서 시멘트 등 건축자재를 무더기로 수입하는 바람에 그동안 중동에서 구슬땀 흘려 번 외화를 다 써버렸잖아요."

즉, 서민에게 내집마련을 실현시켜야 할 주택정책이 부유층을 위한 주택건설과 맞물려 오히려 계급간의 양극화를 조성했고 더욱적으로는 비싼 건축자재의 수입으로 무역적자를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기위한 정부의 강압적인 총액임금 한자리수 인상 정책도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 시키고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층 노동자들까지 전국적인 임금인상 요구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 대외의 존폐 재벌중심의 경제라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의지 없이는 정부의 경제회복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6공정부의 한국경제에 대한 그릇된 시각에서 비롯하나가 있다.

계 구축 스독점자본 형체와 경제구조 개혁 스금융조세의 민주화 스물가안정과 토지공개념 확대 스중소기업 육성및 강화 등 5가지로 압축된다.

'4천만 국민의 생산적 보호 최반 정도를 인구의 3%에 불과한 독점재벌이 지니고 있는 것이고 있다.

경실련 또한 개혁안을 통해 "금융실명제 실시,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세제의 강화, 중앙은행의 독립 등 금융 자율화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것"을 차기정부에 제시하고 있다.

한남대 홍성용 교수(경제학)는 "재벌들이 기술개발 투자에는 인색하고 비생산적 부분에 투자하여 불로소득을 올린 그릇된 행태는 정부와 재벌의 부정부패 구조가 낳은 것입니다. "라고 현 정부의 부정을 지난하며 "이제 더이상 조일금에 기초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기술개발에 우위를 점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이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벌들의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지금까지의 제도를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등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라며 차기정부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더불어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석탄노동연구소는 재벌위주의 경제를 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로 전환시켜야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재벌 소유의 부동산을 정부차원에서 압대해 중소기업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 주는 것이 경제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임을 주장하며 재벌해체를 경제개혁의 첫단계로 꼽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국경제를 비관하지만 그러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희망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경제위기가 독점재벌위주의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러한 희망 또한 올바른 경제구조의 정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특집부〉

해설기사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 선거 결과 분석

민중민주계열 부진, 비운동권 퇴조 현상
자주적 학생회의 힘찬 도약

서울지역 90년도 총학생회 선거가 4.5일을 전후로 한 지역별 분포 마을 내렸다. 투표율이 저조했던 91.92년도 총학생회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이번 선거는 민중해방계열 후보의 강세와 민중민주계열 후보의 부진, 비운동권 후보의 퇴조 등의 결과를 보였다.

12일 현재 집계된 선거결과를 보면 '발전주권'후보본부, 자주적 학생회'를 내건 민중해방계열 후보가 서울대, 연대, 고대, 한국, 이대 등 대부분의 주요대학을 포함하여 선거가 진행된 19개 대학중 17개 대학에서 당선되는 강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홀대 급부상했던 민중민주 계열후보는 예년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민중대통령후보와 민주적 학생회'를 내건 민중민주계열 후보는 서울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후보를 내세웠으나 고대, 덕성여대, 한성대 등 올해 총학생회 선거에서 승리했던 13개 대학에서 여상과는 달리 동덕여대를 제외하고 모두 낙선하는 등 최악의 결과를 보였다. 앞으로 남은 학교에서 선전한다 해도 가장 저조한 결과로 평가되어 옥 91년도 선거기록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계열 후보가 경합을 벌인 학교로는 서울대, 국민대, 동국대, 숙대 등이며 특히 이중 국민대와 숙대의 경우 30표차 안팎으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했다.

이번 선거의 또하나의 특징은 비운동권의 퇴조이다. 사회보수화 경향에 편승, 올해 대거 진출해 학생운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예년과 다름 바없이 보수기미를 보였다.

비운동권 후보는 한양대, 국민대, 한성대, 단국대 등 4개 대학에서 총학생회가 선거가 끝나지 않은 단국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낙선했다. 단지 한양대에서 POTC출신 부부가 예상외의 높은 득표율 올린 정도로 만족해야만 했다.

한편, 작년부터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이번 선거에서 민중민주계열 후보들은 올해 대학, 서울대 등에서 후보를 당선시켰던 전보학생회장계열 후보들은 올해 고대, 홍대, 서울대 등에서 후보를 내고 또한번의 지지를 호소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60%를 밑돌던 91년, 92년도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에 비해 올해는 60%를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특히, 여대의 경우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곳은 덕성여대로 81%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율이 작년선거에 비해 크게 향상된 학교는 서울대, 상명여대, 홍대 등으로 이중 상명여대는 93년도 선거에서 투표율이 무려 9%나 상승하여 70%를 웃돌았다.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간에 크게 갈붙은 쟁점은 현시기 투쟁방향 특히 대선시기 후보진출 문제였다.

현시기 당면 현력에 대해서 민족해방계열 후보들은 범민주단일후보, 민주정부 수립을 축으로 민주야당도 함께하는 민주대연합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력부보는 내지 않되, 범민주 지원의 정치연합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이루한다"는 전국연합의 후보전술방침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하며 전대협 대선운동본부를 통한 실천적인 참여를 제기해 왔다.

반면 민중민주계열 후보들은 전국연합의 후보전술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중대통령후보,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축으로 기층민중 중심의 민주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각 지향간에 내용적 차이는 선거를 민족해방계열이 압도함으로써 형식적 통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안성모 記者〉

현장보도 충남대 총학생회선거 개표함 탈취사건

◇학원시찰도중 충남대 학생들에게 붙잡힌 손석주 정보과 형사 책상에는 그가 소재했던 단검, 수갑, 군화, 전투복등이 널려있다

대전에 위치한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과정에서 폭력에 의한 투표함 탈취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5일 저녁 7시30분부터 충남대 2학생회관 2층 휴게실에서 진행된 선거개표는 '비운동권'후보인 기호1번을 찬모장의 "투장의 투표용지가 검쳐져 나왔다."는 이의 제기로 중단되었다.

9시간에 걸친 논의와 공방속에 새벽 4시경 중앙선관위가 "가상을 참정한 부정선거 주장은 근거없는 억지이며 명백한 부정선거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24시간내에 제출하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결정하여 개표를 진행하려 하자 1번 후보측 10여명의 청년들이 투표함을 둘러싸고 개표를 방해하며 급기야는 투표함을 빼탈하여 통해 아래에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승용차로 옮기려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3명의 학생이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C' 소등이 있은 직후 급히 차를 타고 학교를 빠져나가던 대전 북부경찰서 소속 손석주 정보과 형사가 학생들에게 붙잡혔다. 그는 조교서를 통해 1년전부터 다른 2명의 정보과 형사와 함께 총학생회, 단과대, 대학본부를 담당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예리한 단검과 수갑, 전투복, 군화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수집에는 각 단대 학생회 임원들의 신상파악과 동향, 이번 총학생회 선거 후보들을 '건전', '자민투', '민민투'로 분류해 파악하고 있었다.

〈정미경 記者〉

"사랑으로 매긴 6공 경제성적표—F"

장바구니 물가

요즘 어머니들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6공정부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10%라지만 서민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49.9%, 장바구니 물가는 68.2%라니, 어머니의 한숨은 언제쯤 그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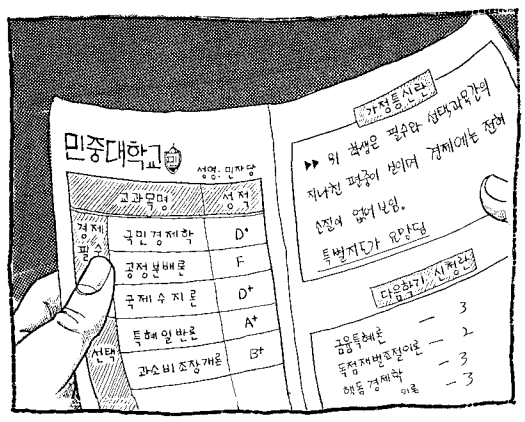
물가불안의 요인은 다름아닌 독점재벌이 설정한 독점가격때문이고 재벌의 땅투기에 의한 주거비상승은 대다수 시민의 기초적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답니다.

특히나 '라면먹는 사람이 살림을 늘여 라면에 김치를 얹어 먹는 서민에게 '돼소비'를 꾸짖는격엔 해외나들이 한번에 수십억 씩 쓰는 '보통사람'은 무슨 소리냐 물러야 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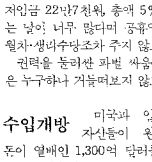
특혜로 성공하는 사람들

민자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정책을 마련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90년 통계에 의하면 53개 재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 총자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민자당은 공약에도 나와있는 재벌의 불로소득을 근절할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3당 합당이후 정부는 재벌에 대해 여신규제를 완화해줘 금융은 재벌이 독점하고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은 1년에 5,000개가 도산했습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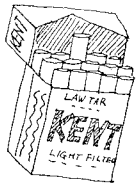
작년 전세값은 26%가 올랐고, 월세값은 46%나 폭등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고작 17% 인상에 평균기본급은 36만원이었습니다.

노동자 4명중 3명이 셋방살이 신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자들이 일은 안하고 돈만 많이 받으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최저임금 22만7천원, 총액 5%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 합니다. 쉬는 날이 너무 많다며 공휴일을 이틀씩이나 없애버리, 쥐꼬리만한 월차·생리수당조차 주지 않으려고 근로기준법도 고치려 합니다.

권력을 둘러싼 파벌 싸움에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생활은 누구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개방



미국과 일본은 자신들이 원조한 돈이 앨배인 1,300억 달러를 자국으로 인출해 가고 있습니다. 기술, 자본, 시장의 해외 의존으로 인해 국민이 피땀흘려 생산한 나라의 재산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외로 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여건이 조금만 좋아지지 않으면 심한 불황에 빠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본적인 치유책 없이 경제문제 해결을 외치는 것은 일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